

‘한계’ 여실히 드러낸 공수처...여야 상반된 주문 내놔

국힘 “수사·지휘 권한도, 역량도 없어...손 떼야”
민주 “법집행 방해하면 누구든 현행법 체포하라”
여야, 최상목 권한대행 책임론 놓고도 날선 공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능’을 드러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향후 공수처의 역할을 놓고 정반대 주문을 내놨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적·절차적 문제를 부각하면서 공수처가 아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탄생한 공수처를 향해 다음에는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며 “그게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일임하려 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서 적법성 오류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의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 기간인) 일 주일을 허비했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법으로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전날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간’에서 “수사 경험 없는 오동훈 처장이 부임해서 물론 판사로서 경력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44명 의원 규탄...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초선의원 공동 기자회견

있지만 답답하다”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과정에 진짜 무기력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신들도 처음에는 윤석열의 민주주의 파괴에 대

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가 법원에서 나온 체포영장도 집행하지 못하자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냐’, ‘소위 공권력 집행이 어떻게밖에 안되느냐’, ‘사법

부 결정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비난이 쏟아지는 걸 보고 한심하게 생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박 의원은 “지금 우리는 좀 냉정

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 공수본(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을 타하기 전에 윤석열이 체포돼야 제2의 내란이 종식되고 무속, 주술 국가가 종식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발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을 놓고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체포부터 결단해야 한다”며 “경호처가 (윤 대통령 보호에 나서서) 국가 사법 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달리 국힘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일부가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탄핵소추하고, 특검하고, 고발하는 집단이라 새로운 면을 보는 것도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직무 유기 혐의로 최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진수 기자

헌재 “양심 따라 독립해 심판...여야 떠나 국민 바라보고 간다”

‘공정성 지적’엔 “헌재 결정 갖고 새 분쟁 만드는 건 주권자 뜻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여권 일각에서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내는 데 대한 헌재 입장이 무엇인지 묻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자칫 ‘헌재 흔들기’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전날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 김경원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면담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1주에 두 번씩 재판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권한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우리 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를 다루지 않을 경우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거듭 말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전날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기록 등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전날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여야,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대표결 대치

민주 “與반대엔 ‘위헌정당’ 굳어질 것”...국힘, 통과시 보수계열 불안감

여야는 7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국회 대표결을 앞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결된 만큼, 내란 특검법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대어(對與)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여당이 내란동조당으로 남을 것이냐, 국민을 위한 국민의힘으로 남을 것이냐는 내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재의요구된 8개 법안이 대표결에서 모두 부결될 경우 쌍특검법을 먼저 재발의하

자는 의견과 함께, 쌍특검법 가운데 내란 특검법부터 재발의해 가결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과 집중’ 전략도 거론된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대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전개돼 보수 진영 자체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지도부는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자리잡은 만큼 ‘이탈 표’도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법 대표결에서 범야권 10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8표의 찬성이 나와 야법안이 가결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경호처장 2차 출석도 불응...10일 3차 불응시 체포영장 유력

“금명 변호인 선임해 일정 조율” 입장에 경찰 ‘시간끌기’ 의구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이 7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이 3차 출석요구도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수순으로 돌입할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박 처장에 대한 강제수사 차원을 넘어서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사전에 허물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마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호처는 박 처장이 오늘과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두차례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 처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고발

에 따른 내란 혐의도 있다.

경찰은 박 처장 등의 지휘로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띠’에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심하고 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등의 추가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방문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1차 출석요구 불응 시 경호 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지난달 경찰이 박 처장을 두차례 잡고인 조사했을 당시에는 경호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해 실제 방문 조사 등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이날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해 10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 본부장이 “김건희·김용현 라인, 일종의 패밀리”라고 주장했다.

또 “이 본부장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다음날인 4일 경호처 간부를 모아놓고 ‘케이블터이 400개를 준비하라’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도 말했다. /연합뉴스



관저 빠져나가는 차량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 재청구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기다리고 있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측 “내란행위 모두 심판대상”...‘내란죄 철회’ 논란 반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

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고, 내란죄·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평가로서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1면 ‘광주시 인구...’서 계속

통계청이 2022년 인구 총조사를 기초로 최근 출생·사망·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해 전망한 장래 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54년 광주지역은 출생 5천명, 사망 1만7천명으로 예측돼 소멸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도 매년 심화되고 있다. 광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2만3천878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했다. 전년 15.6%(22만2천970명) 대비 0.9%(1만908명) 증가한 수치다. 동구가 22.5%로 가장 높고 광산구가

11.2%로 가장 낮았다. 노령화지수는 136%로 전국 평균 178%보다 낮았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인 가구 비율은 증가세다. 광주의 1인 가구 비율은 36.5%(22만8천970세대)로 전국 평균(35.5%)보다 높았다. 광주의 1인 가구 비율은 2019년 31.1%, 2020년 32.4%, 2021년 34.5%, 2022년 35.5%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정란 광주시 인구정책팀장은 “인구감소는 사회적 인식 변화, 취업·결혼·출산, 고령화 등 종합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오는 3월까지 제2차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